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부모 9주 유급 육아휴직 시행

곽 석희 에라스무스 로타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참고자료

- Dutch News (2022.8.2) "New parents are entitled to more paid leave, but is it enough?", <https://www.dutchnews.nl/news/2022/08/new-parents-are-entitled-to-more-paid-leave-but-is-it-enough/> (접속일: 2022.9.23).
- European Commission (2019.8.22) "EU Work-life Balance Directive enters into forc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89&newsid=9438&furtherNews=yes> (접속일: 2022.9.23).
- NL Times (2022.8.2) "Netherlands parents can now take paid parental leave", <https://nltimes.nl/2022/08/02/netherlands-parents-can-now-take-paid-parental-leave> (접속일: 2022.9.23).
- RTL Nieuws (2022.8.2) "Goed nieuws voor jonge ouders: vanaf vandaag recht op 9 weken betaald ouderschapsverlof", <https://www.rtl.nl/economie/artikel/5324438/betaald-ouderschapsverlof-9-weeken-ouders-kinderen-baby-van-kracht.aspx> (접속일: 2022.9.23).
- 네덜란드 근로자보험공단(UWV) 공식 웹사이트, "Wet betaald ouderschapsverlof vanaf vandaag van kracht", <https://www.uwv.nl/overuwn/pers/persberichten/2022/wet-betaald-ouderschapsverlof-vanaf-vandaag-van-kracht.aspx> (접속일: 2022.9.23).

2022년 8월부터 네덜란드는 새로운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육아휴직 관련 법(Wet betaald ouderschapsverlof)은 작년 4월 하원, 그리고 10월 상원에서 최종 가결되면서 오는 8월 2일자로 발효된 것이다.

이전에는 네덜란드 부모가 무급 육아휴직 26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 유급 육아휴직의 주 골자는 육아휴직 9주를 유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이번 육아휴직 제도 확대 개편의 주된 목적은 여성에게 집중되던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부모 양측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이다.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26주(본인의 주당 근무시간 x 26)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9주 유급, 17주 무급 휴직이다. 단, 유급휴직은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전부 연속으로 사용해도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일 단위로(예: 주 2일) 또는 업무시간 단위(예: 일 3시간)과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 역시 동등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일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평균 최대 임금(일 최대 232.9유로, 한화 약 32만 원)의 70%로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나 소속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일부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서 일 임금 100%가 지급될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수입이 줄어든 경우, 국제청에 소속 내역을 통보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주택이나 의료보험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나, 늦어도 2달 전까지는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근로자보험공단(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 UWV) 측에 신청해야 개별 산정된 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회원국들이 2022년 8월 2일까지 부모 간 돌봄노동에서의 평등,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것을 목표로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Directive, EU/2019/1158))'을 제정한 바 있다. 본 지침은 최소 10일간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최소 병가에 준하는 유급휴가), 육아휴직 기간 2개월은 부모 간 양도할 수 없지 각자 사용하도록 지정한 휴가이면서 회원국 결정에 따라 휴직수당 지급, 연 5일의 돌봄휴가제 도입, 유원근무제 보장하는 권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네덜란드 유급 육아휴직 확대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기한에 맞춰 제도적 개혁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근로자보험공단(UWV) 공식 웹사이트의 발표에 따르면, 잉헤 코테(Inge Cotte) 이사장(executive director)는 근로자보험공단은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지난 몇 달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 질의응답 대응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주들은 공단으로부터 한 번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대신 3회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 방식은 특히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재정 운영상 긍정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전에는 남성은 자녀를 출산 후 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0% 유급이다. 여성의 유급 출산휴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네덜란드 고용케어법(Wet arbeid en zorg, WAZO)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 6주, 출산 후 최소 10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출산 전 사용한 휴가 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에는 출산 이후 잔여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테아 출산인 경우, 출산휴가는 최소 20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직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출산휴가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100% 유급(일 최대 219.28유로, 한화 약 30만 원)이며, 출산휴가 수당 역시 근로자보험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노동조합연합(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FNV) 바스 판 베이호베르흐(Bas van Weegberg) 대표는 이번에도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 이행이 반가운 일이라면서,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그는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여전히 이번 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일간지(NL Times) 보도에 따르면, 베이호베르흐 대표는 "유급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70%이니, 급여의 30%는 받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 노동조합연합 측은 100% 전액 휴직수당을 요구한다"면서, 이번에도 시행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차차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RTL 뉴스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재단(Stichting voor Werkende Ouders)' 마르jet 빈세미우스(Marjet Winsemius) 대표는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유급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 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 가정에게 100%가 아닌 70% 급여 지급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새로 이행된 육아휴직 제도는 네덜란드 부모 양측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 이전에 비해 유급 휴가 9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00% 급여 지급이 아닌 점, 사용 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여러 부분이 지적된 만큼, 네덜란드 정부에게는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임신중절 금지 이후,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s)

김 훈재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참고자료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Infant safe haven law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Famili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andpolicies/statutes/safehaven/> (접속일: 2022.9.24).
- The Texas Tribune (2022.6.26) "Texas has a law that allows parents to give up newborns at fire stations or hospitals. Hardly anyone uses it." <https://www.texastribune.org/2022/06/26/texas-safe-haven-law/> (접속일: 2022.9.24).
- NPR(2022.8.3) "Indiana is installing more baby boxes, where newborns can be anonymously surrendered" <https://www.npr.org/2022/08/03/1115546040/indiana-is-installing-more-baby-boxes-where-newborns-can-be-anonymously-surrendered> (접속일: 2022.9.24).
- CNN (2022.8.9) "Conservatives have pushed infant safe haven laws as an alternative to abortion. But few American women use them." <https://www.cnn.com/2022/08/09/us/infant-safe-haven-law-abortion-invs/index.html> (접속일: 2022.9.25).

미국 대법원이 2022년 6월 24일 1973년의 로(Roe) 판결을 뒤집고, 임신중절 허용 여부를 각각의 주(State) 법을 따라 결정하게 한 이후, 주마다 그 판결에 따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s)'이다.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은 1999년 텍사스의 아기 모세법(Baby Moses Laws)을 시작으로 아기의 엄마가 위기의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포기/양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미국 50개의 주에서,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광(Guam), 그리고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실행되고 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은 아주 어린 영아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Arizona), 아칸소(Arkansas), 코네티컷(Connecticut), 조지아(Georgia)를 포함한 7개주와 광(Guam), 그리고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에서는, 태어난지 72시간 이전의 영아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23개의 주에서는 태어난지 30일 이전의 영아만 양도가 가능하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영아의 양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무 곳이나 영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 병원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같이 법이 지정한 장소에만 영아를 양도할 수 있다. 영아의 양도 장소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영아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미국의 5개 주(애리조나, 캔자스, 뉴햄프셔, 등등) 및 푸에르토리코는 교회에도 영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영아를 양도하는 부모의 경우 양도 당시 교회 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만 가능하다. 영아의 양도를 맡은 기관에 대해, 대부분의 주에서 양도 후 영아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면해준 35개의 주에서는 형사책임에서도 면제가 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2).

미국 내에서도 엄격한 임신중절법을 실행하고 있는 텍사스의 경우도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임신중절 금지법으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지 못한 여성들의 대안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텍사스는 태어난지 60일 이전의 영아를 병원, 응급실, 혹은 소방서에 이윤 불문 양도할 수 있다. 영아가 학대 없이 건강한 상태이면 아이를 양도한 부모는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않는다(The Texas Tribune, 2022). 최근 인디애나(Indiana)의 경우 영아를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는 베이비 박스(baby box)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NPR, 2022). 현재 인디애나주의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베이비박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디애나주는 2016년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들었고 현재 113개의 베이비박스가 미국에 존재하는데 그중 86개가 인디애나에 존재한다(NPR, 2022).

보수당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개인의 임신중지 권리를 포기(당)한 여성들에 대해 정부가 양육의 책임을 면해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정-보호서비스부서(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의 데이터에 의하면 텍사스에서 2009년 이후 172명의 아동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한 해에는 21명의 영아의 양도만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임신중절법이 뒤집어지기 전 텍사스에서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임신중절 건수는 50,000건에 달했다(The Texas Tribune, 2022). 이는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맞지 않는다. 또한 많은 여성이 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The Texas Tribune, 2022). 산타클라라 대학교(Santa Clara University) 법대 교수인 미셸 오버맨(Michelle Oberman)은 정부가 충분한 정책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NPR, 2022).

또 다른 문제는 법이 존재하고 베이비 박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여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국 여성이 베이비 박스를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중절 수술을 못했으나 자녀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베이비 박스보다는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고 전해진다. 물론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부모의 숫자도 전반적으로 높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박스와 달리, 전통적인 입양방식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입양장소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고 입양 보낸 자녀와의 장기간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보다는 전통적인 입양방식이 선호된다(CNN, 2022).

따라서 전문가들은 영아의 안전한 피난처법이 임신중절금지법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든 혹은 전통적인 입양 방식을 통해서든,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수는 높지 않고, 또한 자녀의 양육권의 책임뿐 아니라 '임신' 자체가 여성들의 생활, 직장 등에 미치는 장기적이며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CNN, 2022). 현재 더 많은 주에서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및 태어날 아이에 대한 보호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일본 JAPAN

일본에서의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과 임신중절시의 배우자 동의 조건에 관해서

전 예주 동경대학교법학대학법학대학연구과 박사과정

참고자료

- 법령 "母体保護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3AC0100000156> (접속일: 2022.9.3).
- Safe Abortion Japan Project "中絶について" <https://safeabortion.jp/induced-abortion/#inducedabortion02> (접속일: 2022.9.3).
- 公益社団法人 日本産婦人科医会 "人工妊娠中絶の定義" <https://www.jaog.or.jp/sep/2012/JAPANESE/teigen/teigi.htm> (접속일: 2022.9.3).
- 아사히신문(2018.3.19) "「命の選択」のかの 新型出生前診断、開始から5年" <https://www.asahi.com/articles/ASL3D5453L3DULBJ00P.html> (접속일: 2022.9.3).
- 손아욱 (2020)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헌방향 -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1-24.
- 東洋経済 論議(2022.6.20) "「中絶」がクワクワ震る日本人女性の気の毒さ" <https://toyokeizai.com/articles/-/597661?page=4> (접속일: 2022.9.3).
- 법조신문(2022.7.20) "「낙태 시 배우자 동의 불만야」 일본 '모체보호법' 논란" <http://news.koreai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5> (접속일: 2022.9.3).
- 公益社団法人 日本産婦人科医会 2022.6.28) "中絶「配偶者の同意・要件、産婦人科医7割「撤廃を希望」" <https://www.yomiuri.co.jp/medical/2022/0219-OYT1750381/> (접속일: 2022.9.3).
- NHK(2022.8.18) "人工妊娠中絶「不要な同意求めない」周知へ 日本産婦人科医会"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818-1K010378041000.html> (접속일: 2022.9.3).
- 毎日新聞(2022.5.20) "厚労省「終末期医療に必要と認めれば、4つの質問」" <https://mainichi.jp/articles/2022/0520/LK00/00m/040/740700c> (접속일: 2022.9.3).
- 朝日新聞(2022.6.28) "中絶の配偶者同意規定、廃止を「女性の自己決定権を奪っている」研究者 産婦人科医会"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337401.html> (접속일: 2022.9.3).
- もっと安全な中絶をアクション (2022.6.28) "参議院選 政党「医療」「中絶等に関する4つの質問」と政党からの回答" <https://2020-japan.webnode.jp/政党アンケート/> (접속일: 2022.9.3).
- YAHOO JAPAN News(2022.9.6) "「クロースアップ」現代人工妊娠中絶を特集「若し女性減らすために」日本の実情、議論が浮き彫り" <https://news.yahoo.co.jp/articles/c1275a85b3d0f74834daf723c794f541302b16d> (접속일: 2022.9.23).

미국에서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히는 결정이 6월에 나온 이후, 각국의 여성에게서 임신중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임신중절 시의 배우자 동의 조건이다. 이전부터 일본 사회 현실에서는 해당 조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였으나, 최근 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본 시민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른 '낙태죄(堕胎罪)'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체보호법(母体保護法)'에 의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하여 이 경우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모체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인공임신중절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임신중절'로 표기)이 가능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조건1: 임신 22주 미만(임신 21주 6일까지)의 임신일 것
- 조건2: 모체보호법에 규정하는 '지정된(일본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공익사단법인 의사회가 배우자의 의사를 치할) 것'을 임신중절을 시행할 것
- 조건3: 본인과 지참하는 의사를 얻을 것
- 조건4: 이하 중 하나의 해당되는 이유를 가질 것
  1.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강간에 의한 임신

위와 같이 일본에서는 신체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엄격히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체보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태아가 다문증후군 등의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검사를 통하여 평범한 경우 등)에도 그러한 요인의 경제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임신중절의 조건에서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배우자의 동의에 관한 조건이다. 모체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으로는 남성의 중절 거부권과 출산 강제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신은 여성의 신체와 사회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에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며, 남편의 동의 없이 수술한 병원 측이 남편에게 배상을 한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수술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병원을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NHK가 올해 8월 보도한 일본 전국 지정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3%는 미혼자의 임신중절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에서 "상황에 따라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을 한 지정의사는 62%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대로, 같은 조사에서 미혼일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NHK, 2022.8.18).

해당 조사에서 미혼자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로는 '모체보호법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71%), '소송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43%)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모체보호법의 배우자 동의 규정 원칙이 의사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들은 배우자 동의 조건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임신중절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임신부들은 임신중절의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한 상태에 놓이고, 한 번 상담을 진행하였더라도 해당 병원이 거절할 경우 새로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임신중절이 자체되어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가운데 점차 일본 여론에서 해당 조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점은 올 해 5월 경구중절약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견해를 둘러싼 일본 사회 내 갈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구 임신중절약의 투약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5월 17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모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배우자 동의를 필요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일본의 SNS 상에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일에 왜 배우자의 허가가 필요한가" 등의 다수의 비판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모체보호법의 해당 조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인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22년 6월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일본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조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다. 연구자와 조사사 등이 만든 "더 안전한 중절을 액션(もっと安全な中絶をアクション)"은 6월 27일 후생노동성에 약 8만 2천명의 서명을 전달해 인권이민자 및 배우자 동의 조건의 폐지를 요청했다. 약 8만 2천명의 임신중절은 여성의 권리이나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강조했다(朝日新聞, 2022.6.28.). 또한, NHK는 "클로즈업 현대(クロースアップ現代)"라는 방송에서 임신중절을 주제로 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였으며(9월 7일), 이때에 배우자 동의 조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한편 의사들도 해당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작년 11월 오카야마현 의사회는 모체보호법 지정 의사를 상대로 요미우리신문이 진행한 조사에서 조사응답자의 66%(44명)이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자유기술 항목으로부터 "배우자만에 서명이 없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본심"이며, "법적으로 의사의 인지가 약하다"라는 등의 의견 등이 확인되었다(読売新聞, 2022.2.20.). 또한, 올 해 8월에는 일본산부인과사회의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폭력이나 성범죄에 연루되어 임신한 경우나 사실혼이 아닌 미혼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를 구해서 안 되며 ... 기본적으로 여성 본인의 증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일본산부인과사회가 전면적으로 불조해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NHK, 2022.8.18.)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장에서 임신부들의 심적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 동의 조건을 둘러싼 법의 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안전한 중절을 액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당들 중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사회민주당(社会民主党)(日本共産党), NHK당(배우자 동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6월 28일 기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과 국민민주당(国民民主党)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이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의 조속한 개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모체보호법의 배우자 동의 규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폭넓은 이유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모체보호법 내의 배우자의 동의 조건이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의사회가 조금씩 관대함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나, 아직 일본 내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관련한 담론과 정당 및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모체보호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의기준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개정되어 왔는데, 1990년도의 후생성의 통지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기를 통상 임신 22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의 판정에 있어서는 담당 지정 의사의 재량권이 강조된다. 公益社団法人 日本産婦人科医会 "人工妊娠中絶の定義" <https://www.jaog.or.jp/sep/2012/JAPANESE/teigen/teigi.htm>